

농민수당과 공익직불제, 무엇이 다른가요?

자주평등통일0615

경남도민 45,000명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발의한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장 시행하지 않겠다는 경상남도의 태도입니다. 농민수당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경남도는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공익직불제를 평가하여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농민수당을 검토하여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농민이 어렵게 살기 때문에 소득을 지원하자는 것으로 농민수당의 근본 취지를 왜곡하면서 농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자는 뜻으로 카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카드뉴스를 김경수 도지사는 물론 농정 관련 공무원이 꼭 봤으면 합니다.

#농민수당
#경상남도_농민수당_지원_조례

농민수당

정부의
공익직불제랑
무가 다르지?



내용은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제326호) 이슈보고서를 인용하거나 참고했습니다.

계속 확산 중인 농민수당~ 인기비결은???



1



공익 가치를 인정받다

2



농업정책의 틀을 바꾸다

공익 가치 창출하는 농민 스스로 만든 정책

농업·농촌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농민이 스스로 만든 정책...
지금까지의 경쟁력 위주, 규모 중심의 농정에서 사람중심의 농정으로...
지역의 소상공인과 함께 살아나야 한다는 농민들의 의지가 담긴 농민수당!

농업·농촌의 새로운 대안~ 농민수당이 가져온 변화



농 민 수 당

농업·농촌의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한
농민수당이 확산되면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정부의 직불제 개편은
이러한 농민수당 운동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농민수당 영향받은 정부 공익직불제 알아보기



2019년 12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전부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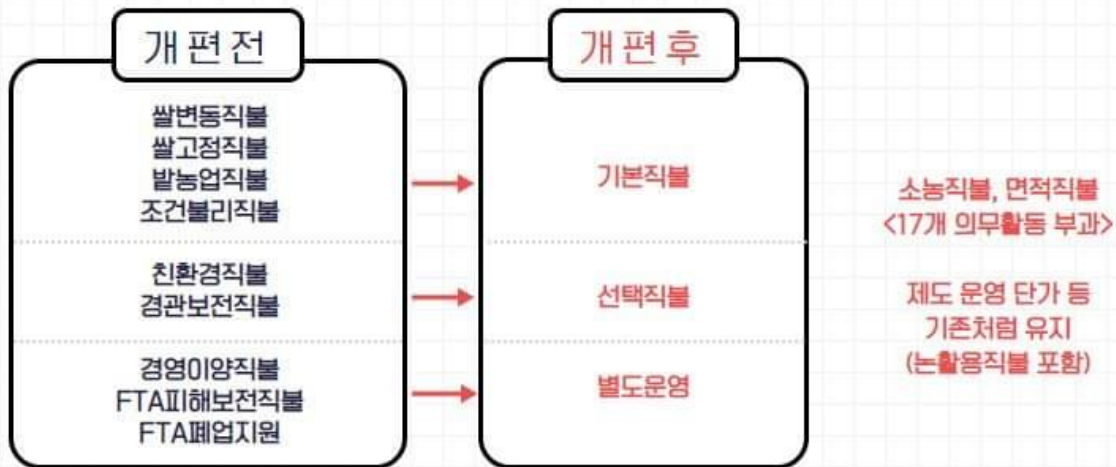
기존 농업직불제의 근거법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법)'로 전부개정

법률명뿐만 아니라 직불제의 기존 틀도 바껴

기존의 6개 직불제는 기본형 직불과 선택형 직불로 개편되었고

3개(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직불제는 별도로 운영



정부 공익직불제는 더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직불제는...

1997년 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한 경영이양직불부터 2012년 한미FTA피해보완대책으로 도입된 밭농업직불까지 다양한 목적을 갖고 탄생했다.

공익형직불제는 쌀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논과 밭을 통합하여 쌀 생산능가와 밭작물 생산능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목적은 쌀 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함이었다.

지금까지의 직불금 제도는...

궁극적으로 농민의 소득을 직간접적으로 보조해 농가소득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낮은 예산규모로 소득보전 수준이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 소득을 지지할 수 있는 직불제로의 확대개편은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농업직불제가 가지는 가장 큰 목적은 농가 소득지지

최근 직불제가 개편되었다고 그 배경과 목적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 개편된 직불제는 WTO 허용보조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 WTO, FTA로 인해 농업이 입는 피해를 보완해주는 소득지지 정책은 직불제를 통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은 확실히 다르다



농민수당은

공익형직불제로의 개편을 논의하기 훨씬 전인 2016년

농민의 길(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총선 정책제안으로 출발하여 연착륙 중인 **완전 새로운 농업정책**이다.

- ✓ 현장 농민들과의 오랜 논의를 통해 기존의 농업정책과는 완전 다른 농업·농촌을 지키는 사람중심의 정책
- ✓ 농업·농촌의 다원 기능, 공익 활동을 하는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
- ✓ 농촌 경관보전,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유지, 식량주권을 지키고 율력 등을 통해 농촌을 관리하는 농민들의 권리

정부 공익직불제와 면적기준/사람기준의 차이



- 정부의 공익직불제에서 농민수당과 유사하다고 이야기되는 부분은 소농직불금 부분
- 소농직불금의 지급요건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농민수당과 많은 점에서 차이가 발생
- 농민수당은 지역의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마다 또 다른 모습

소농직불금은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연120만원 지급하는데
농가 범위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의미하며 정부가 정한 8가지 세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소농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농가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뿐 아니라 비농업인인 가족구성원도 고려(회사원도 농가에 포함).

정부가 개편한 직불제의 소농직불은 모든 농민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0.5ha이하라는 면적규모를 기준으로 가지며 정부가 제시한 요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대상이 되지 못한다. 소농직불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농민들은 면적직불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소농직불의 지급요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농민수당과 일치하지 않는다.
같은 점이라면 농민수당과 직불금은 농업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정부 공익직불제와 면적기준/사람기준의 차이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농림축산식품부	추진주체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 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적근거	자치법규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 지원	개념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목적	- 농업농촌 유지발전 - 지역경제 활성화
- 기본형 공익직불 (소규모농가/면적으로 구분) - 선택형 공익직불	구성	단일
일정규모 농지 등	대상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
농지(면적)	기준	지역 농민
17가지	준수의무	지역마다 차이 (유/무)
- 소농직불 120만원 - 면적직불 면적별 차등단가	지원	±60만원
계좌입금	방법	지역화폐(해당 지역내에서만 사용가능)



지역소멸과 농업·농촌의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주민발의 운동과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추진 의지 등으로 확산 중인 농민수당 !

면적과 물량 중심으로 지원하는 기존의 농업정책은 부의 양극화와 농업공동체 해체를 조장했고, 농업을 황폐화시켜왔다. 규모중심의 농업정책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농민중심의 농업정책은 모든 농민에게 균등한 기회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농민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하도록 농업정책의 틀을 바꾸어야 !

공공수급제 등 농산물 가격보장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농민수당과 같은 농업의 공익정책을 세워 나가야 하며, 특히 농산물 판매량이 적은 중소농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정책의 한계를 공익정책으로 보강해야 한다.



농민수당은 대표적인 상향식 농업정책 !

농업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민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한 농민수당은 지방소멸을 막고자 하는 농민들의 절실함이 담겨 피나는 노력이 뒤따랐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현장 농민들의 염원을 담은 농민수당은 지역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지급수단으로 선택했다.